第287回國會 (臨時會) 外交通商統一委員會會議錄 第 2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10年2月11日(木)

場 所 外交通商統一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2010년도 업무현황보고
 가. 통일부 소관
2. 공청회 개최의 건
3. 북한인권증진법안(계속)
4. 북한인권법안(계속)
5. 북한인권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계속)
6. 북한인권법안(계속)
7. 북한인권법안(대안)(계속)
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북한 지역 영유아 영양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審査된案件

1. 2010년도 업무현황보고 ····· 2
 가. 통일부 소관
2. 공청회 개최의 건 ····· 3
3. 북한인권증진법안(황진하 의원 대표발의)(황진하·강석호·김성수·김옥이·김정권·김충환·나경원·박선영·박준선·손범규·안상수·안효대·양정례·유기준·유성엽·유정복·윤상현·이인기·이한성·전여옥·정갑윤·정하균·허원제·현기환·황우여 의원 발의)(계속) ····· 4
4. 북한인권법안(황우여 의원 대표발의)(황우여·한선교·유기준·신지호·조전혁·김소남·이경재·김효재·구본철·이한성·송영선·정양석·안상수·이종혁·박상돈·이화수·이정선·김성회·현경병·윤상현·이학재·진성호·조진형 의원 발의)(계속) ····· 4
5. 북한인권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홍일표·백성운·이인기·손범규·정옥임·윤상현·신지호·이학재·여상규·성윤환 의원 발의)(계속) ····· 4
6. 북한인권법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황우여·황진하·이경재·김소남·김효재·한선교·이한성·구본철·김성회·이화수·신지호·김옥이·조전혁·박상돈·김성수·양정례·정갑윤·진성호·현경병 의원 발의)(계속) ····· 4
7. 북한인권법안(대안)(계속) ····· 4
1. 2010년도 업무현황보고(계속) ····· 11
 가. 통일부 소관
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영선 의원 대표발의)(송영선·이성헌·한선교·김을동·심재철·이명수·김우남·이정선·정영희·노철래 의원 발의) ····· 34
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 의원 대표발의)(김충환·

김옥이・송민순・공성진・김용구・김영진・강명순・김장수・신상진・이계진・이경재・김창수・이한성・강석호・이종구・안효대・이해봉・임동규・권영세・정진석 의원 발의) ····· 34
10. 북한 지역 영유아 영양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이종혁・조승수・이진복・정수성・홍정욱・김충환・김성순・신상진・김기현・김태원・이성헌・유성엽・유기준・김부겸・김을동・김영진 의원 발의) ····· 34

(10시48분 개의)

○위원장 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김학배 입법조사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진 오늘 회의에서는 2010년도 통일부 업무 현황보고와 현안보고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 1일에 간사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민주평통자문회의법안 관련 공청회 개최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또 지난번에 전체회의 심사를 완료했습니다마는, 축조 심의까지 완료했습니다마는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처리되지 못했던 북한인권 관련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통일부 업무보고를 진행하다가 또 의결정족수가 되면 보고를 잠시 중단하고 공청회 개최의 건, 그리고 북한인권법안 등 의결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0년도 업무현황보고

가. 통일부 소관

○위원장 박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통일부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박선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 잠깐요.

먼저 현인택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박선영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위원장 박진 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존경하는 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들어 처음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최근 남북관계 주요 현안과 2010년 통일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새롭게 임명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장입니다.

유종렬 남북피해자지원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박진 장관님, 통일부 업무계획은 서면으로 대체해 주셔도 됩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그리고 북한 동향과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아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해외공단 남북공동시찰 평가회의가 지난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측은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3통 문제 해결을 촉구하였고 이에 대해서 북측은 임금 인상 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제4차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이 2월 1일 개성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남북은 향후 군사실무회담을 열어서 3통 문제를 협의한 후 숙소와 임금 문제 등을 당국 간 실무회담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강산・개성관광 관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이 2월 8일 개성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측은 기조발언에 앞서 금강산 피격 사망자인 고 박왕자 씨에 대한 명복과 유가족에 대한 조의를 표하는 묵념을 실시하고 북한 측에도 공식 사과 및 유가족에 대한 조의 표명을 요구하였습니다.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진상 규명, 재발 방지, 신변 안전보장 제도적 장치 마련 등 3대 조건이 우선 해결되어야 된다는 점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측의 3대 조건 해결 요구에 대해 북한 측이 실질적 협의에 호응해 오지 않음에 따라 회담이 종료되었고 차기 회담은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협의키로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입니다.

개성공단 관련해서는 설 이후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해서 3통 문제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우리 측 기존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3대 조건의 우선 충족을 북측에 지속 요구할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최근 주요 북한 동향 및 대외 동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근 북한 동향과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2010년 통일부 업무계획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배포해 드린 서면자료로 보고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먼저 의사진행발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박선영 위원님!

○박선영 위원 2월 임시국회 들어서 첫 번째 열리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개의 방식에 대해서 먼저 유감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오늘 10시에 개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나라당 위원님들은 한나라당 위원님들 의견 조율을 하시느라 그리고 민주당 위원님들은 민주당 내의 의견 조율을 하시느라 11시가 다 되어서 이렇게 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북한인권법 때문에 두 당이 의견 조율을 하신 것 같은데 이미 며칠 전부터 오늘의 안건은 상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다 통보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회의가 정시에 개의될 수 있도록 각 정당에서는 사전에 의견 조율을 하셨어야지 10시에 모이셔서 그때부터 의견 조율을 하면 여기 미리 나와 있는 위원들은 뭡니까?

미국은 2004년도에 북한인권법 만들었고 일본은 2006년도에 만들었는데 당사자인 대한민국은 아직도 미적거리면서 여기에 대한 당론을 당일날 와서야, 그것도 거의 50분씩 시간을 잡아먹으면서 회의를 지연시키고…… 의견 조율을 그때 가서 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국민들 앞에 낯을 들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개의할 수 있는 의사정족수가 되면 바로 개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한나라당 위원님들, 민주당 위원님들! 특히 민주당 위원님들, 이렇게 50분씩 다른 분들의 시간을 빼앗아가면서 의견 조율을 여기 와서 하시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은 물론이고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예, 감사합니다.

박선영 위원님의 말씀 취지를 위원회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정족수가 되었기 때문에 인권법 등 의결사항을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2. 공청회 개최의 건

(10시55분)

○위원장 박진 의사일정 제2항 공청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송민순 의원과 윤상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민주평통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우선 공청회 개최 협의 과정을 말씀드리면, 2009년 11월 25일에 열린 제4차 법안소위에서 송민순 의원안을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윤상현 의원안을 수정해서 의결했습니다.

이들 법안의 공청회 개최 문제에 대해서는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윤상현 의원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한 후에 전체회의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010년 2월 1일 간사회의에서는 두 법률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공청회 진술인 선정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는 대표발의 의원 및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계획안을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계획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북한인권증진법안**(황진하 의원 대표발의)(황진하·강석호·김성수·김옥이·김정권·김충환·나경원·박선영·박준선·손범규·안상수·안효대·양정례·유기준·유성엽·유정복·윤상현·이인기·이한성·전여옥·정갑윤·정하균·허원제·현기환·황우여 의원 발의)(계속)

4. **북한인권법안**(황우여 의원 대표발의)(황우여·한선교·유기준·신지호·조전혁·김소남·이경재·김효재·구본철·이한성·송영선·정양석·안상수·이종혁·박상돈·이화수·이정선·김성회·현경병·윤상현·이학재·진성호·조진형 의원 발의)(계속)

5. **북한인권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홍일표·백성운·이인기·손범규·정옥임·윤상현·신지호·이학재·여상규·성윤환 의원 발의)(계속)

6. **북한인권법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황우여·황진하·이경재·김소남·김효재·한선교·이한성·구본철·김성회·이화수·신지호·김옥이·조전혁·박상돈·김성수·양정례·정갑윤·진성호·현경병 의원 발의)(계속)

7. **북한인권법안(대안)**(계속)

○**위원장 박진** 다음은 의사일정 3항에서 7항까지 5건의 북한인권 법안 관련 안건들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황진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 의사일정 제4항 황우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안, 의사일정 제5항 홍일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안, 의사일정 제7항 북한인권법안(대안), 이것은 저희 상임위의 대안입니다.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동 안건들의 심사경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들은 지난해 11월 25일 제274회 국회 제9차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와 함께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었습니다.

법 제정에 반대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견이 종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는 바로 의결에 들어가는 것이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난번 회의에 참석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섭단체별로 그분들에게 발언 기회를 드린 후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들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낙균 위원님 또 송민순……

교섭단체별로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윤상현 위원님 그다음 구상찬……

○**박선영 위원** 그러면 비교섭단체는 못 하나요?

○**위원장 박진** 제가……

○**김충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 예,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십시오.

○**김충환 위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미 충분한 양당의 의견이 있었고 또 오늘 각 교섭단체별로 또 그리고 교섭단체가 아닌 위원들만 말씀을 한 분씩 하고 시간을 단축해서 의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진** 저희가 지난번 축조심의할 때 대략적인 내용은 전부 개진이 됐습니다. 또 찬성·반대 입장도 다 개진이 됐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교섭단체별로 두 분씩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교섭단체도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낙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신낙균 위원** 우선 민주당의 입장을 간사를 대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라고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더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이유가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을 이렇게 입법화하면 입법의 실효성은 없고 대북 압박의 상징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반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최근에 남북정상회담

이 추진되고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이끌어 갈 책임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인권법 제정이 오히려 경색국면을 더 경색화하고 그래서 결국 정상회담을 가로막는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6자회담이나 평화협정 등의 논의에서 우리가 불리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우려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하고 화해 협력을 해야 될 이 특수관계에서 이것은 악재로 악용될 소지는 있지만 실효성은 결코 없다는 이유로 민주당에서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소위원회 심의할 때는 민주당 소위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점에서 민주당 위원들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시는 것이 저는 합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남북 간 긴장 완화와 화해 협력을 실현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인권이 점진적으로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이 취할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윤상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위원 북한인권법안이 수년여 만의 산고 끝에 드디어 우리 국회에 나왔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꼭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가혹한 인권 유린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의 참상을, 함께 고통을 나누고 또 함께 고민하고 그들이 인류 보편적 가치 아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하면서 북한인권 실태조사기관이 빠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독하고 동독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잘쯔기터에 있는 중앙기록보존소를 통해서 동독의 인권 유린 사태를 계속해서 수집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북한인권 실태조사에 대한 구체적이고 또 체계적이고 또 개별적인 실태조사를 위한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인권재단 내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진 윤상현 위원님 제안하신 내용 또 저희들이…… 재청하실 분이 계시면 재청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유선진당의 박선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영 위원 지금 윤상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재청합니다.

그런데 용어를 '인권침해기록보존소'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통일 이후에 침해 사실에 대한 사실 규명을 하는 데도 필요하고 우리가 북한인권법을 만드는 데 아주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인권침해기록보존소 조항을 반드시 넣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 남북정상회담이 제대로 올바르게 되기 위해서라도 이 법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안 나온 것 중에 제5조를 보면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통일부 소관에, 산하에 이렇게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권 문제는 단순히 통일부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처와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리고 기록을 하거나 실태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다른 부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저는 이것을 국무총리 산하로 승격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제8조에 보면 인도적 지원이 나오는데 이 인도적 지원의 내용이 지나치게 선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는 지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지나친 선언적 규정만의 조항은 문제가 있다고 들어서 최소한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조항이 하나 더 들어가든지 아니면 규제를 할 수 있는, 이런 투명성이나 전달·분배·감시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중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어떤 벌칙을 둔다든지 하는 제재조항이나 벌칙조항이 들어가 주어야 비로소 인도적 지원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에서 두 가지 점을 법안에 추가로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다음은 민주당의 송민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순 위원 우선 제가 이 문제에 대한 발언

전에 말씀이지요.

위원장님, 이 인권 문제는 여러 관점에 따라서 특히 법안에 대해서는 많은 토론이, 충분한 토론이 필요한데 조금 전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2명씩만 이렇게 해 가지고 말씀을 하자고 그러셨나요, 토론을?

○위원장 박진 교섭단체별로 우선 두 분씩 드리겠습니다.

○송민순 위원 우선요?

○위원장 박진 예.

○송민순 위원 우선 2명씩 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박진 말씀 먼저 하시지요.

○송민순 위원 제가 지금 의사진행 관계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 좀 끄고 새로 시작하십시오.

○위원장 박진 예, 5분 다시 드리겠습니다.

○송민순 위원 북한인권은 당연히 개선이 되어야 되고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개선시키는가에 대한 방법론에 있어서 지금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 이런 정도의 안이라면 이것은 일종의 국회의 결의안, 미국이나 다른 데서는 이런 것을 센스 오브 캉그리스(sense of congress)라고 그래서 결의안 성격입니다.

지금 기록보존소 설치를 하자, 이런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이런 것은 새로 토론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은 노력한다, 설치한다 이런 건데 이 내용 전체가 실제적으로 행동을 요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우리 정부의 기구 그다음에 정부의 관련법 이런 것으로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법이 실질적인 북한인권을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 인권적 지원, 인도적 지원 이것을 막는 법이 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이지요 북한에 대해서 국제적 기준에 의해서 식량 지원 분배 감시가 될 때 지원한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의 실상은 그렇게 되지가 않게 되어 있거든요. 북한이 그렇게 우리가 요구를 한다고 해서 될 것 같았으면 이미 북한은 다 바뀌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법에 의하면 사실상 북한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법은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선량한 주민들을 도와주는 법이 아니고 오히려 이런 법을 통해서 북한의 위정자들이 북한의 주민들을 탄압하고 통제하는 그러한 빌미가 되어서 북한의 정권을 도와주는 법이고 북한의 선량한 주민들한테 탄압을 가하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위해를 가하고 그 사람들을 굶게 하고 얼게 하는 그런 법이 되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신중해야 된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기록보존소 이런 것 여기에 새로 나왔습니다마는 독일도 그러한 기록보존소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으로 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은 얼마든지 정부 직제상 운영해서 내부적으로 조용히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굳이 법으로 이렇게 해서 명시적으로 해야 될 필요는 없고 북한의 인권이 어떻게 침해되고 있는지 기록은 정부에서 충분히 해야 될 겁니다. 그것은 기존의 우리 법무부 관련 기구라든지 또 우리 통일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2300만 북한에 있는 주민들의 인권을 당연히 고려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도 자유를 찾아서 넘어온—금년도에 2만 명 될 텐데—남쪽에 와 있는 북한이탈주민 이 사람들이 말씀이지요. 제가 현장에 딱 가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지원하는 인력들은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임시고용을 해서, 소위 4대 보험도 안 되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북한이탈주민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북한이탈주민지원기금법을 만들자고 그랬습니다. 지금 통일부 예산에서 이것을 떼어 가지고 주는 것은 이게 서로 제로섬 게임이 되어 가지고 이탈주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합니다.

수만리의 역경을 거쳐서 남쪽에 내려온 북한이탈주민들을 건전한 대한민국 시민으로도 수용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 선전적인 내용을 잔뜩 담고 있는 그러한 북한인권법에 이렇게 치중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이전에 저는 기금법을 설치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의 북한인권법, 일본 인권법 이야기했는데 미국이 북한이탈주민 몇 명 받아들였습니까? 지금 6년에 걸쳐서 아직 100명을 채 못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1만 8000명을 받아들이는 동안에 미국은 미국 사회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북한이탈주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러한 북한인권법을 했다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다 하고 있어요. 무슨 미얀마나 이란이나 쿠바나 이런 데 대해서 관련법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사정이 다른 거고 일본은 납북자, 이것 관련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북 간에 많은 교류를 해서 북한의 선량한 주민들을 보호하고 해야 될 이러한 위치에 있는 한국이 지금 이런 법을 만들어서 오히려 식량 지원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을 못 하게 하는 이런 것을 꼭 해야 되는지 이 자리에 있는 위원님 여러분들과 그리고 특히 통일부장관님을 포함해서 이것에 대해서 좀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 박진 이제 마무리를 해 주시지요.

○송민순 위원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식량 지원, 인도적 지원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이러한 법 때문에 북한의, 지금…… 오늘 눈이 많이 왔지요? 춥고 배고픈 사람들은 김정일이나 김정운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춥고 배고픈 게 아니에요. 북한의 주민들을 춥고 배고프게 하는 이러한 법을 꼭 해야 되는지 통일부장관께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지원기금법 거기에 대해서 왜 통일부가 이렇게 냉담한지, 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 감사합니다.

또 발언해 주실 위원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구상찬 위원님 또 박상천 위원님 또 이미경 위원님 계신데 우선 의결할 사항은 먼저 의결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윤상현 위원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박선영 위원님이 재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대안인 북한인권법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국회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수정안에 대해서는 먼저 의결을 하고 절차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미경 위원 일단 나갑시다.

○박상천 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위원장 박진 그리고 지금 토론하신 위원 분들이……

○박상천 위원 수정안 의결한 다음에 본회의에서 토론하는 것 봤습니까?

○이미경 위원 일단은 전체를 다 하고 해야지 그것부터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위원장 박진 그런데 지금 발언하실 위원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시간상, 지금 제약상 이것을 전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동영 위원 뭐가 그렇게 급해요? 천천히 차근차근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막 몰아붙입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박진 지금 의결정족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위원님도 신낙균 위원님하고 또 송민순 위원님 말씀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같은 내용이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한나라당의 구상찬 위원도 발언이 계신데 중복이시면 발언을 철회해 주시고……

○구상찬 위원 예.

○남경필 위원 짧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그러면 민주당 위원님 아까 신청하신 분이 두 분 하셨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여기서 그냥 더 이상……

○남경필 위원 의사진행발언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필 위원 왜냐하면 저한테 기회를 안 주시면 제가 다른 의사 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 인권법에 대해서는 총론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지금 남북정상회담이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옳으냐 하는 이런 민주당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도 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통과를, 찬반을 다 여야 간에 토론을 하고 표결을 해서 통과를 시키고 나서는 좀 본회의 통과 시기는 유연하게 조정한다는 이러한 조건으로, 이렇게 기권하시거나 다 퇴장하시고 이러지 말고 여야 간에 토론을 하고 오늘 안에는 표결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여야 간의 간사 합의를 통해서 통과를 시키고, 뭐 통과가 되든 부결이 되든 그런 절차를 밟고, 그리고 본회의 시기는 좀 유연하게 가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동영 위원 발언 좀 주세요.

○김충조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박진 의사진행발언 하시지요, 김충조 위원님.

○김충조 위원 김충조 위원입니다.

제가 외통위에 편입된 위원으로서 이런 얘기하기 상당히, 제 나름대로는 이런 얘기를 안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처음 와서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밖에서 볼 때 국회 외통위를 상당히 격이 높은 상임위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편입이 되어서 나름대로 참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여야 간에 발언자 수를 2명으로 제한을 한다 이 얘기를 듣고 제가 내심 속으로 상당히 당황하고 또 놀랐습니다. 국회라고 하는 것이 토론의 광장이고 이 토론은…… 과거 우리 국회가 국민들에게 참 일그러진 모습, 잘못된 모습, 물리력이 동원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인 것도 충분한 토론의 광장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야 간에 2명으로 제한을 한다 이 얘기는 품격 높다고 할 수 있는 외통위에서 그런다고 하는 것이 참 격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요.

가능하면 이런 문제는 충분히 토론하도록 하고 국회법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법의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동 의제에 대해서는 시간과 횟수에 상관없이 거의 무한정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런 법을 제한한다, 이것은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상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다 이렇게 보고, 위원장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충분하게 토론을 마친 뒤에 그러고 나서 관련법을 처리하는 것이 온당한 순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김충조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에서는 토론에 대해서 제약을 두거나 또는 무슨 다른 부담을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상임위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판단을 한 것입니다. 한나라당에서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한 분만 드렸습니다. 또 한분은 의사진행발언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이것은 효율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위원장 박진 정동영 위원님 발언하시지요.

○정동영 위원 충분히 토론을 해야지 무슨 이렇게 막 몰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남경필 위원 말씀도 충분히 토론하고 굳이 본회의까지 서두를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진 예.

○정동영 위원 난 상식에 합당한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박진 그러면 간사님들……

○정동영 위원 잠깐 발언 좀 주세요.

○위원장 박진 지금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정동영 위원 아니,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정동영 위원 아니요, 발언하겠어요.

○위원장 박진 아니, 잠깐이요. 발언권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잠깐 간사님들 저한테 좀 오시지요. 간사님들 오십시오.

○박선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 총재님 하셨는데요.

○위원장 박진 제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간사 협의를 하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李會昌 委員 간사 협의하기 전에 한마디 합시다.

○박선영 위원 위원장님!

○정동영 위원 제한하지 마세요. 이것을 왜 제한을 합니까? 충분히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해야지요. 이처럼 중요한 법안이 어디 있어요? 숨넘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무제한으로 발언하게 하세요.

○위원장 박진 그러면 간사 협의를 거쳐서 우선 의사진행발언 두 분 말씀 듣고, 민주당 위원님들 말씀을 두 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아니 아니, 왜…… 발언할 수 있는 사람 다 주세요.

○박선영 위원 의사진행발언부터 주세요.

○이미경 위원 다 발언을 해야지요.

○위원장 박진 우선 이회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會昌 委員 간사 간 협의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협의했다는데? 간사 간 협의 내용이 뭐

예요?

○위원장 박진 간사 간 협의 내용은 우선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민주당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많다고 그러셔서 한두 분 더 말씀을 듣고 의결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동영 위원 충분히 토론합시다, 충분히. 이것을 왜 그렇게 서둘러서 몰아갑니까?

○李會昌 委員 저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 위원들께서 발언하시는 것과는 별개로 이 법안이 지금 소위를 거쳐서 온 걸로 압니다. 이 법안이 이미 소위를 거쳐서 왔고 2년 가까이 지금 됐는데 지금 와 가지고 아직도 토론이 부족하다, 논의하자 하는 것은 저는 그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인권법안 언제 다시 또 될지 모릅니다. 물론 말씀하고 싶으신 분께 적절하게 발언권 드리는 건 좋지만 인권법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토론과 논의 가지고 끌지 말고 오늘은 이것을 좀 결론을 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벌써 오랫동안 이렇게 끌고 가는 것 이것 자체가 매우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진 잘 알겠습니다.

정동영 위원님 발언하시지요.

○정동영 위원 우선 의사진행 관련해서 한 말씀하고 본발언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가까이 외통위원회에 있었지만 북한인권법에 관해서 발언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또 인권법이 만들어지면 이것을 집행할 통일부장관과 통일부 관계자들이 나와 있는데 의결에 앞서서 충분한 토론과 발언이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의사진행발언합니다.

시간 다시 좀 주세요.

○위원장 박진 말씀하십시오.

○정동영 위원 이 법이 내용을 보니까 뉴라이트 지원법이에요. 북한인권법이라는 제목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인택 통일부장관, 뉴라이트의 대북 노선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반대합니까? 소신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뭐 저는……

○정동영 위원 뉴라이트 견해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뉴라이트라고 하는 것……

○정동영 위원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물론 시중에서 통용되는 뉴라이트라는 말은……

○정동영 위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대북 적대시 노선과 대결 그리고 북한 붕괴 노선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 그 같은 노선에 대해서 현 장관은 동의합니까, 반대합니까, 찬성합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저는 그 개념을 그렇게 정의하시는 것은 저로서는 그렇게……

○정동영 위원 아니, 그 개념이든 어떻든 이런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YES, NO’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것은 ‘YES, NO’로 대답할 문제는 아니지요.

○정동영 위원 왜 이게 ‘YES, NO’로 대답할 문제가 아닙니까?

현 장관은 철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학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는 분명히 철학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동영 위원 그럼 뉴라이트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게 뉴라이트에 대해서 정 위원님께서 정의를 하시고……

○정동영 위원 됐습니다. 잠깐이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내용에 대해서 저보고 ‘YES, NO’로 하라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정동영 위원 이 정부도 90년에 노태우 정부에서 남북 간에 맺어졌던 남북기본합의서를 출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본합의서는 “남북 간의 체제와 제도를 인정·존중한다. 두 번째 중상·비방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서로 파괴·전복 노력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뉴라이트 법이라고 하느냐? 이 법에 보면 풍선, 삐라 날리는 단체에 돈 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렇게 해서 정상회담 할 수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 시점이 적절하다고 봅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저는 이 법이……

○정동영 위원 간단명료하게 좀 대답을 해 주세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는 이 법이 ‘삐라 날리는 단체에다가 돈을 주는 그런 법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 인권의 증진을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한 것이고 이 법의 내용에도 보면 또 북한에 인도적 지원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전체적인 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음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이 법을 제정해서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익, 북한 인권을 어떻게 증진할 수 있다고 평가합니까?

주무장관으로서 대답해 보세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이 법을 죽 잘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동영 위원 어떤 이익이 있어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8조에 보면 인도적 지원에 관한 그런 내용도 들어 있고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또 우리 시민단체 홍보·교육, 남북교류를 또 촉진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이 법에 의해서 대북 삐라 살포 단체에 대해서 지원금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대북 삐라 단체에 대한 지원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정동영 위원 아니, 이 법이 되면 이 근거로 이용되겠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는 이 법하고 대북 삐라 단체하고는 관련이 그렇게 없다고 봅니다.

○정동영 위원 노태우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을 만들었습니다, 노태우 정부 임기 5년 동안에. 그리고 5년 전에는 남북관계발전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는 지금 북한인권법을 만듭니다.

그런데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노태우 정부 때 맺었던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충돌하고 그다음에 교류협력법 정신에 충돌하고 그다음에 5년 전에 제정, 여야 만장일치로 여야가 이 외통위를 통해서, 당시 제가 통일부장관으로서 그 법을 상정했고 의회에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 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 법 2조에 보면 '남북관계 발전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뉴라이트 법이라고 제가 규정하는 이유는 국민적 합의가 아닙니다, 이 법은. 뉴라이트에서는 주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뉴라이트 법 가지고 어떻게 남북관계를 발전시킵니까?

남북관계를 발전시키자고 여야가 합의하고 정부랑 5년 전에 만들었고 20년 전에 교류협력법 만들었는데 이 정부가 하는 일이, 여당 위원들과 하는 일이 이 법과 충돌한다면 저는 충분히 이것은 재검토해야 하고 다시 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장관 견해를 묻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우리 정동영 위원……

○정동영 위원 법과 충돌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관점에서 대답해 주세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정 위원님이 규정하시는 뉴라이트 법이라는 게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요.

다만 이 법은 의원입법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시고 또……

○정동영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지난 정부 때 대북·대남 방송 확성기 이것을 다 철거했습니다. 이것 복구해야 되겠습니까, 철거한 게 맞습니까?

대남·대북 비방, 전복, 파괴 움직임을 중단시켰는데 이것에 대해서 온당하다고 판단하세요, 아니면 잘못됐다고 보세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정부는 현재로서는 그러한 무슨 철거했던 그런 시설들을 다시 복구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동영 위원 위원장께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서둘 일이 아니고 우리 남경필 위원도 이것을 시간을 갖고 하는 게 중요하다……

○위원장 박진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물론 상임위에서 처리하자는 전제가 있습니다마는 회의 진행을 그런 관점에서 숫자 제한하지 마시고 추가발언도 주시고 계속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 잘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세 분이 발언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 개진이 있으셨다고 봅니다. 또 지난번 축조심의할 때 각 조항마다 찬반의견에 대해서 전부 저희들이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서 오늘 최종적으로 각 교섭단체별로 의견을 듣고 처리하기로 이렇게 했고 오늘 아침에 또 간사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또 각 교섭단체의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들었습니다.

윤상현 위원이 아까 제안하신 데 대해서 박선영 위원님이 재청을 하셨습니다.

○정동영 위원 일을 기계적으로 진행하시지 마

시고……

○위원장 박진 그래서 국회법에 따라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운영에 대해서……

○정동영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진 먼저 이의가 있으신지 의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동영 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위원장 박진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동영 위원 위원장! 퇴장하겠습니다.

○이미경 위원 왜 토론을 종결합니까?

○정동영 위원 퇴장합니다, 퇴장해. 표결에 응할 수 없어요.

○위원장 박진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선영 위원님이 제안하신 데 대해서는 재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북한인권증진법안, 의사일정 제4항 북한인권법안, 의사일정 제5항 북한인권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북한인권법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7항 북한인권법안(대안)에 대해서 오늘 채택된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주당 위원 퇴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 2010년도 업무현황보고(계속)

가. 통일부 소관

(11시28분)

○위원장 박진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인택 통일부장관이 보고하신 업무현황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신 위원님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위원님!

○윤상현 위원 장관님, 북한인권법이 드디어 통과됐습니다.

이 법 3조에 보면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통과에 대해서 장관님의 소회와 또 어떤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현인택 북한 인권에 대한 위원님들의 그리고 또 국민들의 우려와 또 관심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입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상현 위원 현재 통일부에 두고 있는 북한인권자문위원회는 언제까지 구성을 마칠 계획이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오늘 법안에 보면 부칙에 따르면 6개월 후에,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시행되는 대로 인권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상현 위원 기본계획하고 집행계획이 있는데 올해 안에 국회에 보고할 수 있겠죠?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상현 위원 북한인권재단은 언제 설립 등기를 마칠 생각이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북한인권재단은, 또 이것은 물론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만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후에 시행을 하고 또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을 위촉해서 설립 준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마쳐서 북한인권재단도 빠른 시일 내에 설립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상현 위원 민간 북한인권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언제부터 가능하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이것도 예산부처와 물론 협의사항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민간지원단체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부처와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위원 북한에서의 화폐 개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화폐 개혁 이후에 현재 북한의 새 화폐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다고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지금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물론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러면 화폐 개혁이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고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지금 진행 과정에 있기 때문에 100%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어려운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오늘자 모 일간지를 보면 김영일 내각 총리가 인민반장들에게 화폐 개혁이 잘못됐다라고 시인했다는 보도는 보셨죠?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보도는 봤습니다.

○윤상현 위원 이번 조치는 계획경제로의 복귀가 목표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래서 시장과의 전쟁을 벌인 건데 결국 이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겠죠? 전망이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지금 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런데 지금 북한 주민의 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시적인 어떤 북한에 대한 지원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 스스로 식량과 생필품 생산을 개혁해서 공급을 늘려가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하여간 무엇보다도 앞으로 북한의 주민 생활의 향상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지원 노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잘 진행돼야 됩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지금 북한 핵 문제가 가장 큰 관건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면 남북이 여러 가지 서로 협력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상현 위원 지금 북한 지배층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식량이 아니라 달러라고 생각하시지요, 장관님?

○통일부장관 현인택 현금도 필요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제가 보기에 북한이 지금 '개성 관광부터 먼저 하자. 그리고 금강산 관광하자. 그 다음에 개성공단 임금 협상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맞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장관님?

○통일부장관 현인택 지난 우리 금강산관광·개성관광 실무회담에서 북한 측이 우리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성 관광은 3월 1일부터 금강산 관광은 4월 1일부터 일단 재개를 하고 보자 이렇게 지금 제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정부는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진상 규명과 또 재발 방지 또 신변 안전에 관한 확고한 합의가 서로 있어야겠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개성 관광,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임금 그 세 가지 순서를 북한이 제시한 순서를 한번 보세요, 장관님.

지금 달러가 가장 필요하니까, 개성 관광이 달러가 가장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이고 그다음에 개성공단 임금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달러가 워낙 고갈된 상태니까 달러를 필요한 그 순서대로 얘네들이 정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 남북정상회담 접촉에서 이게 잘 안 되지 않았습니까? 북 측의 달러 요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하여간 남북정상회담의 접촉 소위 설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우리 정부는 말씀드린 대로 북핵 문제 해결을 또 그게 진전이 있어야 되고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이 있어야 남북정상회담에 임한다는 그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윤상현 위원 북한은 왜 이렇게 달러를 필요로 한다고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뭐 경제 사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상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선진당의 박선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영 위원 자유선진당 박선영 위원입니다.

(박진 위원장, 김충환 간사와 사회교대)

북한인권법 오늘 통과가 됐는데 제가 총리실로

위원회 옮기자 그런 게 이제 그대로 통일부에 남게 됐습니다. 앞으로 통일부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헌법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향상을 위해서 장관께서 온 몸을 바쳐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영 위원 지난번 저희 외통위 회의 때 장관께서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내용을 전혀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본회의 때도 대정부질문 기간 동안에 다른 의원들 질문에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아직도 아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뭐 이제 여러 가지 언론에 나온 내용, 보도들은 저도 충분히 봐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하여간 남북정상회담에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 윤상현 위원님도 질의를 또 주셨습니다마는 정부는 우리가 세운 그 원칙을 철저히 앞으로 지켜 나갈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선영 위원 원칙을 지키려면 일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주체부터가 바라야, 올곧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창구가 적법한 창구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부에서 이야기 나오는 대로 국정원이 주도하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통일부에서 적절한 역할을 찾아서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남북정상회담이 되면 의제가 뭐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의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박선영 위원 인권하고 납북자 문제, 국군포로 문제 말씀하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박선영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장관께서 1월 27일인가요, 한반도미래재단 창립기념 세미나에 가셔서 말씀하신 NLL 관련된 발언도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말 그대로 NLL 사건을 실망스럽다고 하셨지요? 그게 실망스럽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정말로 실망스러운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 왜 NLL 사건에 대해서 통일부에서는 한 말씀도 안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남북정상회담이 되면 인권 문제 처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지금까지의 발언을 보면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군포로가 560명이고 납북자는 몇 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작년 12월 31일에 제출한 통일부의 2010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납북자가 505명으로 되어 있던데 그렇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납북자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후 납북자냐 또……

○박선영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 납북자 505명이 통일부가 인지하고 있는 납북자의 명 수입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건 '전후 납북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박선영 위원 전시 납북자는 팽개쳐도 되는 겁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시 납북자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박선영 위원 전시 납북자가 상당히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의 순서로 보면 먼저입니다.

그리고 전시 납북자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납북될 당시의 인적 구성원을 보면 새로 나라를 건립하는 데 꼭 필요한 사람들을 족집게로 집어내듯이 데려간 전쟁 중의 테러 행위입니다. 언론인, 공무원, 예술가 할 것 없이 법관까지 판사, 변호사들까지 다 끌고 갔습니다. 이것은 나라를 새로 세우는 데 필요한 인적 요소를 갖추기 위해서 데리고 간 전쟁 중의 테러행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통일부가 201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시면서 납북자를 505명이라고 하신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 앞으로는 납북자를 말씀하실 때 '12만 명 이상, 12만 명 이상의 납북자 문제' 이렇게 공식적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도록 하겠고요.

○박선영 위원 그다음에 지금 지난 정부부터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마는, 북한의 CDM사업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요, 이제 그거를 하려면 남북 간의 기본적인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여간 조금 그 점에 대해서 중점

적으로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영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 정권 들어와서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정권에서도 하려고 했죠. 그게 통일부가 아니라 민주평통에서 주도권을 잡고 2007년부터인가요,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남북관계가 민주당으로서는 지난 정권이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던, 잘 대화가 되던 그 시절에도 CDM사업이 잘 안 됐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하여간 전반적으로 남북관계가 좀 잘 순항이 되고 그런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될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박선영 위원 너무 원론적인 답변만 계속 되풀이해서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북한의 숲을 가꾼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제는 북한의 핵 문제가 가시적인 효과를 거둔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 그 다음에 CDM사업도 결과적으로는 다국적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 다국적 투자를 해주면 앞에서 토론하신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달러에 목말라 있는 그들에게 달러를 갖다 주는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CDM사업이 명분적으로는 대단히 좋고 통일 후를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중의 하나지만 그러나 앞뒤를 잘 생각해서 해야 된다라는 점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장관 생각은 어떠신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하여간 저희들이 충분히 유념해서 지금 우리 박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를 신청하신 분이 구상찬 위원님, 홍정욱 위원님, 이범관 위원님, 정옥임 위원님 네 분이 지금 신청을 해 둔 상태입니다.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상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찬 위원 장관님 고생하십니다.

지난해 11월에 두 차례 개성회담에서 11일하고 17일인가요, 두 차례 개성회담이 있었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구상찬 위원 거기서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가 논의됐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작년……

○구상찬 위원 작년 11월.

○통일부장관 현인택 아니 그거 아닌데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상찬 위원 아니 무슨 말씀하세요?

차관이 그러면 답변하세요, 차관이 많이 아시는 것 같으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아니 저한테 질의하십시오.

○구상찬 위원 아니 두 차례 납북자 문제, 국군포로 문제 회담하셨지 않습니까, 개성에서?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런 적 없습니다.

○구상찬 위원 그래요?

수백만 불이라는 구체적인 액수까지 오고 갔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는 그런 사실 알지 못합니다.

○구상찬 위원 11일 회담은 통일부에서 주관하셨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구상찬 위원 18일 회담은 누가 주관을 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로서는 아는 사실이 없습니다.

○구상찬 위원 장관,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정보와 또 언론 보도 및 외신을 바탕으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책임자인 장관께서 자꾸 모른다고 얘기하시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옛날에 대정부질문 할 때 장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판 프라이카우프(Freikauf)를 제안한 것 기억하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구상찬 위원 장관께서도 아주 좋은 제도, 좋은 지적이라는 말씀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렇습니다.

○구상찬 위원 저도 북한이, 지금 정상회담과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핵 문제와 국군포로 송환입니다. 국군포로 및 납북자를 데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 트랙(two track)으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옛날부터 돈을 주고서라도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동의하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돈을 주고서라도' 하는 그런 앞에 단서를 달아 주셨기 때문에 아마 그 문제는 조금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구 위원님이 제시하는 그런 아이디어 그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그 질문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도적 문제는 인도적인 그런 트랙을 가지고 그런 협력을 해 나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지원과 또 우리가 안고 있는 인도적 문제—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를 하나의 트랙으로 같이 넣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해결의 길이 열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상찬 위원 장관, 혹시 박철수 씨라는 분 알고 계세요? 연변대학을 졸업했고 또 북경무역대학을 졸업했고 북한에 유류사업을 하고 또 최근에는 북한 국가개발은행 총재로 임명이 되었지요. 박철수……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구상찬 위원 이 사람이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 총재를 맡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옛날에 임태희 장관과 싱가포르 회동을 주선한 사람입니다. 장관이 모르신다니까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모를 리도 없으시지만. 이 사람이 장관 만나자고 제안을 했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만나지도 않았지만 그 사람 자체를 제가 잘 모릅니다.

○구상찬 위원 질문이 안 되네요, 그러면.

좋습니다. 자꾸 모르신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뭘 좀 도와 드리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질의를 드리는 건데 자꾸 모른다고 그러시니까 알겠습니다. 불편하신 모양인데……

장관, 캠벨 차관보 만나셨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만났습니다.

○구상찬 위원 그분이 오셔 가지고 "정상회담보다 6자회담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그 발언을 강조하고 갔습니다. 장관 면담 시에도 그런 얘기했나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저하고 얘기를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구상찬 위원 그런데 전체 대화록을 보시면 정상회담보다 6자회담 우선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 보십시오.

또 우리가 지금 정상회담을 계속 주장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정상회담 조율 및 합의해야 된다고 미국에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미 간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서로 상호 공조를 철저히 하자……

○구상찬 위원 그러면 장관, 김태효 청와대 비서관이 미국 간 것은 아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압니다.

○구상찬 위원 왜 갔는지 아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통상적인 업무 협의차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상찬 위원 좋습니다.

장관, 그러면 캠벨 장관, 캠벨이 와서 장관님과의 만남 또 혹은 한국에 와서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안 쓰신 것 아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상찬 위원 통일부 직원들을 상대로 캠벨 차관보의 발언록을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그랜드 바겐'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한미 간에 이런, '그랜드 바겐'과 '포괄적 패키지' 뭐 이런 단어들이 지금 요새 한미 간에 중요한 단어로 떠오르는데 이게 북핵 갈등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저는……

○구상찬 위원 북핵 주도……

○통일부장관 현인택 전혀 그 점에 대해서는, 구 위원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지금 질문하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유의 갈등은 한미 간에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

○구상찬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구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께서는 좀 진지하게 질의가 되도록 좀 참여를 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현인택 제가 하여간……

○위원장대리 김충환 다음에는 우리 홍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홍정욱 위원 홍정욱 위원입니다.

'성사 가능성이 고조되었던 남북 정상회담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여러 군데서 들려옵니다. 그래서 남북 간 조율보다는 북·중, 한미 간에 긴박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언급하시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세세하게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향후 남북 대화가 이제 적극적으로 재개될 텐데요. 그것에 필요한, 오늘은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볼까 합니다.

장관께서는 남북 간 맺어지는 남북 합의서가 조약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남북 합의서, 뭐 조약의 성격이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홍정욱 위원 예를 들어서 지난 1991년에 체결된 남북 기본합의서 그리고 2007년 10·4 공동선언 이와 같은 것이 조약의 성격을 일부 띠고 있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것은 조약은 아니고요, 일종의 하여간 남북 간의 정치적 합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정욱 위원 남북 기본합의서에 대해서 국회가 동의권을 가져야 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그 점에 대해서는 그때도 동의를 국회에서 하지는 않았지만 '동의권을 가져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하여간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정욱 위원 남북 합의서가 조약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오랜 논란이 있던 것을 잘 아시고 계신 텐데……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홍정욱 위원 기본적으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느냐, 혹은 내용상으로 남북 합의서가 조약의 조건을, 국제법상의 조약의 요건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논란은 계속 빚어져 왔고, 그래서 국회에게 조약 비준 동의권을 부여한 헌법 60조1항에 따라서 지난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나 2007년 10·4 선언 역시 조약의 성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반드시 동의를 해야 된다라는 여부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홍정욱 위원 그런데 일단 남북 합의서가 조약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현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1조도 보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렇습니다.

○홍정욱 위원 이것은 이것 이외에 상호원조, 안전보장, 국제조직 관련, 이와 같은 대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런 조약 내용에 대해서 국회에게 동의권을 부여한 헌법 60조1항의 일부 내용을 차용한 겁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재정 부담과 입법사안 관련만 떼어 낸 거지요. 떼어 내서 남북 합의서에 적용을 한 건데요.

남북관계 중요성을 고려할 때 남북 합의서에 대한 국회 동의권의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타국과 체결한, 예를 들어서 상호원조나 안전보장 관련된 조약에 대해서는 국회가 동의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는데 그 어느 나라보다 중요한 북한과의 상호원조나 안전보장에 관한 합의에 대해서는 국회가 아무런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더욱이 남북 간 합의라고 하는 것은 늘 정치적 정쟁, 정략적 공세의 대상이 되어 왔고 또 정당성을 끊임없이 도전받기 마련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라는 것이 대의 민주주의하에서 국민의 동의를 뜻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저는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북 화해 시기가 도래하고 통일이 다가오면서 남북 간 합의의 양과 수위가 계속해서 급증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를 모을 수 있는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고 본 위원은 이 같은 사항에 대해서 국회가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추진 중입니다. 해서 현재 상호원조, 안전보장, 우호통상 항해, 주권의 제약 관련…… 재정적 부담과 입법사안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헌법 60조1항의 사항들에 대해서도 국회가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안을 추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장관,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하여간 조약은 입법에 관한 사항이니까요 국회에서 충분히 좀 논의를 하시고 그것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정욱 위원 그리고 우리가 법과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어서 구상찬 위원님께서 프라이카우프 제도를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것을 뒷받침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현재 없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렇습니다.

○홍정욱 위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보더라도 정부가 북한을 벗어나서 제3국에 체류 중인 국군포로를 송환할 때는 물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북한 내에 있는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송환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납북피해자의 보상·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더라도 납북자의 생사 확인, 송환 이런 것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되어 있지만 어떤 물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은 없고요.

반면에 이산가족과 관련해서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10조를 보면 통일부장관이 실태조사, 생사 확인, 소재 파악 등에 대해서 물자 또는 경비를 북한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홍정욱 위원 이 똑같은 항목이 국군포로 법하고 납북자 지원 법에도 반영이 되어야 저는 프라이카우프의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법 개정도 준비 중인데 정부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하여간 그것은 충분히 좋은 의견이 되실 수 있도록 좀 하여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욱 위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홍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홍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범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관 위원 최근에 남북관계에 대해서 많은 변화 양상을 보이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지금 2012년도에 강성대국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러한 의도는 결국에는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미국과는 평화협정 체결을 비롯한 여러 가지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또 대내적으로는 후계체제를 공고화하려는 게, 기본적인 북한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뭐 하여간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런데 북한이 참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최근에 우리 남북관계에 상당한 유연성을 보여 주고 또 중국을 최근 방문하고 있고 또 미국을 향해서 유화 제스처를 쓰고 하니까 북한이 진정으로 뭘 좀 변화를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런 착시현상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북한이 진정으로 변화하려고 그러는 지금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충환 간사, 신낙균 위원과 사회교대)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북한이 변화하려고 했을 때에는 무엇보다도 핵 문제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핵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한 북한의 변화는 우리가 신뢰하기 어려운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상태에서 참 남북관계를 보는데 혼란스러운 여러 의견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가운데서 지금 미국의 입장을 한번 정리를 좀 해 보십시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미국은 이 점에 대해서…… 특히 북한이 미국에다가 최근에 요구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6자회담에 돌아오기 전에 제재를 좀 풀어 달라, 그리고 평화적 논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마는 미국은 이에 대해서 매우 단호하게 '일단 6자회담에 돌아와야 된다.'라고 지금 촉구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예를 들면 북한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의 입장은 타당하기도 하고 매우 확고하기도 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범관 위원 중국의 입장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중국도 북한이 빨리 6자회담에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노력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일본의 입장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일본도 마찬가지로 미국과 북한 핵 문제에 관해서는 거의 비슷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미국하고 같은 입장이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이범관 위원 제가 이런 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제 상당히 유동적인 남북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주변국과의 협조체제를 잘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런 데 대한 정밀한 예의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응을 잘해야 된다는 뜻에서 좀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 국제전략연구소의 전 남북관계 전담 교수의 말에 의하면 북한 전략의 최고 목표는 핵보유국이다, 동시에 미국과 국교를 맺는다, 그런 전제하에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미국과 국교를 맺는 것이 최고의 목표고 최하의 목표는 6자회담을 한 20여 년간 질질 끌면서 그렇게 되면 기진맥진할 것 아니냐, 주변 국가들이. 그렇게 해서 하여간 핵보유국의 지위를 할 수 없이 받아들이게 만드는 게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장관이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핵 보유를 포기하지 않는 한은 남북관계의 기본 문제 해결이 참 어렵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중국 공산당 국제전략연구소 교수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하여간 북한의 의도가 어떻든 간에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저희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범관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갈 길은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마찬가지로 개혁 개방의 길로 가도록 우리가 유도해 주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진정한 개혁 개방이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이제는 좀 나서서 북한에다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수차에 걸쳐서 강조를 해 왔고 앞으로도 강조를 할 것입니다.

○이범관 위원 1분만 조금 더 쓰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많고 공식적 입장에서 말하시지 못할 입장에 있는 것도 아니까 그것은 차치하고 하여간 남북정상회담은 해야 되겠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물론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로 북한이 북핵 문제 해결의 어떤 자세가 되어 있다면 그리고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의 자세가 되어 있다면 저희들은 남북정상회담에 나설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범관 위원 제가 수차 강조합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남북정상회담은 첫째, 공식채널을 통해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또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진정으로 남북관계의 신뢰가 회복되어야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마지막으로 남북관계의 정례화된 틀을 통해서, 1년에 한두 번이라든지 정례화된 틀을 통해서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조 위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박상천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낙균 지금 발언 마치셨습니까?

이범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상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박상천 위원 북한인권법 같은 중요한 법을 토론도 못 하게 하고 지금 처리했습니다.

서독은 동독 인권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지만 동독 인권에 관련된 법안을, 법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가? 전략적인 협상을 해야 되는데 동독 행위를 여러 가지로 규제하는 법을 내면 협상에 지장이 올까 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도 못 하게 하고 처리해서 민주당에서 지금 박진 위원장 본인이 이 자리에 없어서 좀 미안하기는 합니다마는, 윤리위에 제소를 하겠습니다.

역대 외교통일위원장 중에 발언을 못 하게 한 위원장은 처음이에요.

지난번에 한미 FTA 때도 야당 위원 출입을 봉쇄해 가지고 폭력사태를 일으켜서 외통위 망신을 시키고 이번에는 북한인권법 같은 중요한 법을 발언도 못 하게 하면서 통과시켰어요. 이 버르장머리를 고치기 위해서 윤리위에 제소키로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鄭玉任 委員 질의 순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낙균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지요. 여기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옥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玉任 委員 우여곡절 끝에 북한인권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반발하고 계시는데 제가 법안심사소위의 일원으로서 몇 가지 설명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인권법안과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이 없는데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었다 이러한 주장을 하셨는데 실제로 여러 차례 유보를 하면서 민주당의 참여를 기다려왔고 마지막 상황에서는 그 절차에 따라서 통과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박상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독과 서독의 경우를 볼 때 인권문제를 오히려 서독이 건드리지 않음으로써 협상에 있어서의 어떤 유연함에 방점을 두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보면 미국은 일찌감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인권법을 통과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 얼마 전에는 우리 한국이 같은 민족, 동포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입장을 보면 상당히 미국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을 하고 있고 오히려 미국과의 대화 채널에 북한이 더욱 목을 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이 극단적으로 갈리고 그러나 어찌됐든 이 법이 상임위를 통과함으로써 북한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미 법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한의 인권 위반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재를 가하기보다는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당적으로 진정으로 북한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중지를 모으는 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북한 인권과 관련해 가지고 국민적인 합의가 있었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북한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는 것이 국민적 합의인가에 대해서 저는 또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통일부장관께 하겠지만 지금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이고 정부도 마찬가지이고 오히려 정상회담이라든지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든지 북한 붕괴 노선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을 통일부장관께 하겠습니다.

이번에 북한인권법안 관련해 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된다는 인권위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통과된 법의 제10조 그리고 인권위법의 19조 내용 중에서 상당 부분이 중복된다는 것이 인권위원회가 제기하는 문제인데 실제로 또 2006년 인권위원회의 북한 인권과 관련한 입장을 보면 '대한민국정부가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북한 지역에서의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이렇게 스스로 적시하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으리라 봅니다마는 업무 중복에 대해서 통일부 나름대로 좀 깊이 있는 고려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하여간 북한 인권문제가, 오늘 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관련해서는 역시 통일부가 정부의 주무부처로서 이 문제를 다뤄 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존 어떤 법률과도 충돌하는 것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鄭玉任 委員 그다음에 정상회담과 관련해 가지고 장관께서는 얼마 전에 모 세미나에서 "우리 정부는 금년도에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정상회담을 포함한 모든 남북관계의 개선을 뜻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좀 구체성 있

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요, 정상회담 문제는 시기를 꼭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언제 이루어져야 되겠다 또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하여간 북핵문제 해결을 저희 정부가 대북관계에 있어서 최우선적 정책목표로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도적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남북관계가 일종의 순순환 되는 그런 관계로 가져가는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가야 남북관계가 제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鄭玉任 委員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 인도주의 문제의 해결을 상당히 강조하셨는데 사실 지난 2007년의 정상회담 합의문에도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9·19선언이라든지 2·13합의에 대해서 성실의무 노력을 명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합의문 자체가 휴지조각이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 내부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폐 개혁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북한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것 같은데 그러한 심각한 상황에 남북관계의 기본합의문 정신 그리고 평화와 상생 공영이라는 정신에 입각해서도 반드시 북한 쪽과의 대화, 고위급 대화의 문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사실 정부는 일관되게 언제 어느 때나 어떤 급에서나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그래서 고위급회담도 필요한 경우에는 물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어떤 정도로 전향적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달려 있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다면 고위급회담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낙균 정옥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震夏 委員 한나라당 황진하 위원입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요약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낙균 위원, 김충환 간사와 사회교대)

제일 첫 번째는 요즘에 북한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궁금증들이 많습니다.

서해상에다가 사격하겠다라고 공포를 해 놓고 또 위협사격도 하고 또 조금 이따 장소를 옮겨가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NLL 사격을 하면서 위협을 하고 있고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개성 관광하고 저쪽에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고 회담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화폐 개혁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것이 무슨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다고 하면서 전문가라는 분들 얘기를 통해서도 북한이 통제력에 크게 무슨 손상이 가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그런 대로 화폐 개혁하고 난 다음에 그냥 가는 것 같다라고 하더니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더 문제가 많아지고 급기야는 북한의 총리가 대국민 사과라고 하는 전에 없었던 그런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서 국민들은 정신이 없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

그래서 통일부장관께서 지금 북한의 현 상황, 정치 상황이 됐든 경제 상황이 됐든 이런 현 상황을 좀 간략하게 국민들이 자꾸 혼동 안 되도록 말씀하실 수 있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북한이 특히 올해 들어서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서 남북관계의 어떤 진전의 의지도 밝혔습니다마는 지금 보내 오고 있는 그러한 신호는 상당히 이중적인 태도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대화가 진행되는 그 와중에도 대남 성명을 내고 비난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서해에 해안포를 쏘고 하는 그런 매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물론 지금 남북관계의 현실이기도 합니다만 또 북한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하여간 저희 정부가 그런 점에 대해서 매우 유의하고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黃震夏 委員 북한의 식량 상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단편적으로 말씀하신다면?

○통일부장관 현인택 작년에 우리 농진청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외부 지원이 없다면 아마 최소 50만t에서 110만여 t이 부족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黃震夏 委員 아까 윤상현 위원도 그런 좋은 질문을 하셨다고 보는데 북한이 식량이 부족하면 우선 국민들이 굶지 않도록 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언급한 것처럼 쌀밥을 먹이고 싶은 생각이 정말 있다면 지금 쌀을 도와 달라고 국제사회에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개성 관광하자고 해서 현금 벌어들이는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계식량기구에서 온 대표들한테 다가 물어봤어요. 북한이 식량 구입(수입)을 위해서 얼마나 돈을 쓰는가, 자기들이 알고 있기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식량이 부족하다는 게 지금 장관님 말씀처럼 50만t~100만t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국제사회에다 돈을 대달라, 현금을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굶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식량을 좀 지원해 달라, 그리고 현금을 확보하게 되면 식량 구매에다가 제일 먼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포를 쏴 대면서 관광은 하자고 그러고 식량은 모자라고 이런 상태가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통일부를 포함해서 정부에서 아주 신중하게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黃震夏 委員 두 번째는 장관님께서 내일이면 취임 1주년을 맞이하십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많았던 1년으로 회고가 됩니다.

그런데 장관님에 대해 지금 두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신과 원칙을 견지한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으로 남북관계를 새롭게 재설정하고 있다, 이것은 장관님의 이제까지의 임무수행상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핵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남북교류를 과도하게 제한한 탓에……

1분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예.

○黃震夏 委員 남북관계가 퇴보하고 오히려 갈등 긴장을 더 키웠다는 부정적으로, 비판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장관님 스스로 생각할 때는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는 그게 긍정적인 평가가 되었든 또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평가가 되었든 아주 겸허하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일부가 남북관계를 안정시키고 또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미래를 잘 공존공영으로 가도록 하는 격려와 충고의 말씀이라고 듣고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黃震夏 委員 예, 저는 그동안에 참 원칙과 소신으로 잘하셨다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다는 사항을 잘 유념하셔서 앞으로 여러 가지 남북관계든지 대북문제에 있어서 소신껏 그러나 비판의 목소리도 경청하시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직무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알겠습니다.

○黃震夏 委員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황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천 위원 아까 의사진행발언으로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북한 인권 증진을 바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 인권 증진을 바라는데, 이것을 법으로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통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북한이 지금 평화협정 체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6자회담이 재개될 것, 그리고 북한 비핵화 과정에 진전이 있을 것, 이럴 때 평화협정을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너무 과도한 입장이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이것은 똑같습니다—핵 폐기에 진지한 태도를 보여 주면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달리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장관께서도 직접 6자회담에 대해서 말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면 평화협정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현재의 정부 입장이 종전에 말한 대로 비핵화에 진전이 있어야 평화협정을 논의한다는 것인지 비핵화에 대해서 진지한 태도만 보여 주면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비핵화에 대해서 진지한 태도를 보여 주는 것과 비핵화에 진전이 있는 것과 그렇게 큰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보즈워스가 얘기한 그런 내용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비핵화가 상당히 진전되어서 거의 마지막 순간에 평화협정을 하는 그런 것은 조금 과도하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의 입장은 9·19 공동성명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핵화가 진전되어 가면 별도의 포럼에서 평화협정 문제는 다룰 수 있다는 그 점에 대해서 여전히 그렇게 지금 저희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천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비핵화가 진전이 이루어져 가면 별도의 포럼에서 그 문제를 다룬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6자회담에서 다루고 별도의 포럼에서는 다룬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9·19 공동성명의 정신이고 거기 조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여전히 저희들은 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천 위원 그리고 평화협정 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가 당사국 문제, 북한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배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미군 철수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원래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 군대의 철수가 포함되는 것이 과거의 관행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그 당사국에서 한국을 배제하려는 북한의 주장은 한번 해 본 소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부의 참여 없는 평화협정이 과연 어떤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북한이 주장은 하겠지만 우리가 쉽게 배척시킬 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미군 철수 주장에 대해서도 6·15 정상회담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문안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미군이 있는 조건에서 남북이 왕래하고 교류 협력하면서 서로 도움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입장은 이미 미국에 전달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2000년 10월 25일에도 북한을 방문한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에 대해서 “주한미군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 왔다. 지금은 주한미군이 동북아의 안정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미군 철수 주장을 강경하게 고집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요, 평화협정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당사자로서 참여하지 않는 평화협정은 저희 정부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그렇게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저희 한국이 평화협정에, 한반도 문제의 주 당사자이기 때문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문제는, 그것은 한미 간에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미의 주권적 사항이기 때문에 한반도에 평화가 이루어져서 실제로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간다면 북한이 주한미군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국과 미국이 주권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상천 위원 미군 철수 주장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한국과 미국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상천 위원 그래서 저는 그 평화협정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통일부가 이것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하나의 요소로 간주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아까 그랜드 바겐 말씀을 하셨는데요, 만약에 진짜로 남북 간에 정말

로 그랜드 바겐과 같은 북핵 문제의 정치적 대타결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저는 평화협정도 그 틀 안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우리 통일부 장관님, 지금 저희 민주당은 전 세계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이 어느 나라에서든 어느 단체에 의해서든 침해되어서는 안 되고 신장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가지고 그와 같은 목적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전연 없습니다.

그런데 법의 만능주의에 빠져 가지고 아무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의 실효성이 전연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만저만이 아닌 부작용이 파생이 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적어도 북한인권법의 제정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입장을 보는 겁니다.

또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기존의 법령에 의해서 북한의 인권 개선 노력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북한을 자극하고, 특히나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북한에게 정서적으로 감정적인 측면에서의 상처를 줘 가면서 또 국가의 자존심과 권위를 손상시켜 가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효과적인 정상회담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북한 인권이, 그동안 이 북한인권법과 같은 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북한의 인권이 심각한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하여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어쨌든 인권 문제는……

○박주선 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가니까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 법이 없어서 북한 인권이 이렇게 악화가 됐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뭐 법이 없어서 악화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또 북한 인권의 실상을 좀더 우리가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지금 한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북한 인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대한민국의 노력을 할 수가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러니까 더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이 법이 제정되게 되면 북한 인권이 개선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는 이 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면 그러한 것들이 개선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주선 위원 우리 정부의 6·15 선언과 10·4 선언에 대한 입장은 뭔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박주선 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기존의 남북 합의를 다 포함해서 6·15와 10·4 선언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그 이행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주선 위원 좋습니다.

10·4 선언의 2항에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서 남북관계를 상호 존중하고 신뢰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했다', 그러면서 '남과 북은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북한의 인권 침해 사태는 북한의 내부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요, 그것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

○박주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조항 규정에 어긋납니까, 안 어긋납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포괄적으로 저는 그거하고는 조금…… 바로 직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박주선 위원 북한의 내부 문제라고 볼 수가 없어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북한주민의 인권 문제는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무슨 내부 문제……

○박주선 위원 정상회담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정상회담 선언도 이행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정상회담을 추진해 가지고 성과 있는 정상회담이 되겠습니까?

적어도 또 다른 정상회담을 추진하려면 국제사회가 만장일치로 지지를 했던 6·15 선언과 10·4 선언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먼저 천명을 하고, 그래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가지고 또 다른 정상회담의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또 그 합의가 다음 정권에 가서도 반드시 지켜진다는 선례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한 제 견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점에 대해서는 어쨌든 6·15와 10·4 선언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존의 다른 남북관계에서 있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합의를 다 포함해서 존중하고 저희들이 그 이행을 위해서 앞으로 남북대화에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지금 오늘 이 상임위원회에서 위법한 절차에 의해서 통과되었던 북한인권법 대체안은 8조에 보면 "국가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 다음 각 사항이 준수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노력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지켜질 수도 없는…… 아주 효과가 전연 없는 규정일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으면 법의 존엄성이 문제가 되고, 이것을 지키도록 한다 하면 사실상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없어 가지고, 이것은 북한주민의 인권을 신장시키고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소하고 금지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8조의 항을 잘 보시면, 이것은 제가 해석하기는 분배의 투명성을 강조한 조항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가 북한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을 할 때는 분배의 투명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틀에서 보면 이 내용은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주선 위원 그런데요……

○위원장대리 김충환 좀 이따 보충질문……

○박주선 위원 아니, 지금 질문할 분도 안 계시는데 그것도 또 5분만 제한하고 그러시면 됩니까? 아니, 한나라당 위원들 없어요.

○위원장대리 김충환 순서를 드릴 테니까 조금……

왜냐하면 5분 하고 1분 추가 연장해 드리고 한 것은 원칙이니까 지키고 잠시 후에 또 우리 박주선 위원님께 제가 기회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요 부분은 잠시 후에 가 버리면 좀 불편한 시간이……

○위원장대리 김충환 예, 그러면 1분만…… 이거는 예외적으로 특별히……

○박주선 위원 그다음에 10조에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한다고 그랬는데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지 않으면 북한의 인권 신장 노력을 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이미 다 규정이 되어 있는 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중복이 됩니다. 굳이 이런 내용으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려는 의도가 뭔지, 또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중복이 된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그것 좀 대답해 주세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먼저…… 이것은 의원입법이라는 점을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주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시라는 말이에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북한인권재단이 각호에 지금 쭉 이런 사업을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권 실태조사 하고……

○박주선 위원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해서는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또 그 인권위원회에서 하는 사업들은……

○박주선 위원 그래서 이렇게 아무 실효성도 없고 오히려 법의 존엄성만 훼손하는 이런 법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들어서 정상회담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 분위기 자체도 실종을 시키거나 훼손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세계 인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인권이 신장되고 보호가 되어야 한다면 쿠바나 미얀마나 이란과 관련된 인권보호법도 정부나 또는 여당 의원들이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남북 관계와 기타 무슨 쿠바나 다른 나라의 관계를 동일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저희 정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예,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송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송민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오전에 북한 인권……

저는 반북한인권법이라고 규정하지만 북한인권법 관련되어서 통일부장관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진행 차원에서 요거 좀 답변을 듣고 질문을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을 좀 주시고……

○위원장대리 김충환 예, 우선 그러면 잠깐 시계를 세워 주시고 아까 답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송민순 위원 통일부장관님, 제가 북한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을 할 때 기준이 전달·분배·감시 이런 게 안 되면 사실상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통일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했고요.

지금 통일부장관님께서 계속 의원입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의원입법이라도 이걸 행정부에서 앞으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모든 입법에서는 행정부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장관님의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은 이것이 앞으로 입법이 되든 안 되든 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냥 '이건 의원입법이라서 따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통일부는 이렇게 생각한다, 통일부장관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 달라는 뜻에서 아까 했거든요.

그거 듣고 제가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예, 그 질문 답변하시고 그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아마 또 우리 송민순 위원이 똑같이 8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8조를 보면 "국가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의 기준에 따라서 전달·분배·감시될 것, 둘째는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북한주민에게 전달될 것, 세 번째는 지원을 받는 북한주민이 그 지원의 제공자를 알 수 있도록 할 것, 네 번째 인도적 목적 외에 군사적 용도 등 다른 용도에 이용되지 아니할 것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군사적 용도에 쓰지 말고 또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이 되고 또 전달되는지를 잘…… 분배를 감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있다 하여서 북한에 인도적 지원이 전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예, 송민순 위원님 끝내고 이제 시작하시지요.

○송민순 위원 의사진행은 끝내고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에 관해서 통일부장관님은 이것이…… 법이 말씀이지요, 노력한다 해서, 노력해 가지고 안 되면 이 법의 취지는…… 그래서 법을 만드는 겁니다. 안 되면 이것을 안 주도록 하는 것이,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면 이걸 안 주도록 하는 게 이 법에 들어 있는 정신인 겁니다.

그래서 통일부장관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가지고 가셔야지 그렇게 통일부가, 다른 부처도 아닌 통일부가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주 유감스럽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하셨으니까 답변 더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 통일부 업무계획에 '그랜드 바겐'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지금 그랜드 바겐에 대해서 국제사회 어느 한 나라에서도 반향이 있었습니까, 공식적인 반향?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문제에 관해서는……

○송민순 위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에코가 있었느냔 말이에요, 에코?

○통일부장관 현인택 내부적으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민순 위원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에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작년 5월이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실제로 상당한 호응과 반응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송민순 위원 있으면, 그 많은 언론보도 중에서 그리고 기자회견이나 각국의 정상이나 외교당국자들이 할 때 한 번도 그랜드 바겐의 'G'자도 못 들어 봤습니다. 그런 것을 잘 아시고, 국제사회의 현실도 잘 아시고 하시는 게 맞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통일부장관님, 국제정치학 하시니까 레종 데트르(raison d'etre)라는 말 들으시지요, 레종데트르?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송민순 위원 국가가 무슨 일을 할 때는 국가적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송민순 위원 북한의 특수한 상황, 남북관계의 특수한 상황이면 정상회담 같은 것은 일정 기간 비밀리에 추진할 수 있는 거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하여간 그 점에 대해서는……

○송민순 위원 아니 '글쎄' 하지 마시고, 남북관계의 특수한 상황에서 이런 문제는 비밀리에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하여간 저희 정부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송민순 위원 이게 지금 그 정도라면 남북관계 이런 것은 비밀리가 아니고 처음부터 대놓고 해가지고 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것은 정부에서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 아는 일 아니겠어요? 통일부에 있는 간부들도 그 정도는 다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언론에 이렇게 많이 보도가 되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 또 '정부 고위 당국자' 해서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만약에 실체가 있는 일이라면 정부가 일을 아주 잘못하고 이것 성사가 돼도 아주 어렵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공개됨으로 해서 안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실체가 없다면 이것은 정부가 아주 터무니없는 국내정치를 선전하는 것이고,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어느 길을 가더라도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현상이 생깁니까? 왜 '청와대 핵심 관계자', '정부 당국자' 이렇게 나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저는 '정부의 핵심 당국자' 또는 뭐 이렇게 인용하는 것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송민순 위원 알았어요. 모른다는 것은 이 정부가 제대로 기능이 안 돌아간다는 이야기로밖에 안 들리는 겁니다. 다 그렇게 이해할 겁니다.

그다음에 통일부장관님께서 지난번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 간에 핵 문제 할 때 '지난 2007년 10·4 선언에서 그냥 언급만 있었고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다. 그래서 남북 간에 하면 이러한 구체적인 성과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말씀하셨지요, 국회 본회의에서?

○통일부장관 현인택 제가……

○송민순 위원 2월 5일자 국회 본회의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언급만 있고' 그렇게 정확하게 워딩은……

○송민순 위원 '10·4 선언에서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언급만 있었고 구체적인 성과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구체적인 조치는 없지요, 사실은.

○송민순 위원 구체적인 조치나 성과는 없었다 이런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렇습니다.

○송민순 위원 '구체적인 조치'도 좋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조치라고 말씀하시면,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됐으면 좋겠는데 되면, 우리 정부에서 지금 생각하는 핵 문제에 대한 남북 정상 간의 구체적 조치 또는 구체적 성과는 뭡니까? 여기서 그 벤치마크를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것은 제가 일일이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송민순 위원 아니,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통일부장관 현인택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요.

○송민순 위원 아니, 여러 가지가 아니라 구체

적인 성과, 그러니까 남북 간의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 이행을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한다 그 이상의 구체적인 조치를 하나,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하여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송민순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성과나 조치에 대한 본인의 기준도 없으면서 왜 그러면…… 과거에 했던 것은 잘못된 것이고 모자라는 것이고 내가 더 하겠다 그러면 어떤 것을 하겠다고 제시를 해야지, 그래야 국민들이 아는 것 아니겠어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하여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순 위원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개념은 없어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물론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송민순 위원 아니, 여러 가지가 있으면 예시를 하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말한 남북이 공동 노력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공동 노력한다 이것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하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성과, 예를 들면……

○통일부장관 현인택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 그 말씀을 드리면 마치 그것이 남북의 정상회담의 핵 문제에 관련된 구체적인 저희들의 조건이다, 이렇게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가능성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민순 위원 조건을 걸기는 싫은 거지요? 그런 거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걸기 싫다기보다는 그 말씀을 지금 구체적으로 드릴 수는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순 위원 그다음에 지금 통일부도 평화체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정부가 평화체제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회피합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정부가 평화체제 논의를 회피하는 것은 없습니다.

○송민순 위원 지금 비핵화 진전이 된 다음에 그때 가서 평화체제 해야 된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아니, 당연히 그것은 시퀀스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송민순 위원 그게 왜 시퀀스입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당연히 시퀀스, 중요하지요.

○송민순 위원 통일부장관께서 이 문제……

통일부장관과 외교부장관에게 질의하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본질을 모르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평화체제라고 하는 것은 되려고 그러면 남북 관계가 정상화되고 남북기본합의서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서 진전이 되고 그다음에 미·북 간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이렇게 돼야 평화체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송 위원님은 시퀀스를 어떻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민순 위원 아니,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북·미 관계의 정상화 없이 평화체제가 됩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물론 남북관계 정상화가 돼야지요.

○송민순 위원 돼야지요, 북·미 관계도 되고.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렇습니다.

○송민순 위원 그러면 남북관계 정상화나 북·미 관계 정상화의 또 하나의 조건은 뭡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핵 문제 해결이 돼야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송민순 위원 뭐라고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핵 문제 해결이……

○송민순 위원 핵 문제 해결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송민순 위원 그러니까 핵 문제 해결, 남북관계 정상화, 북·미 관계 정상화, 이것이 한 바퀴로 묶여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9·19 공동성명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9·19 공동성명에 1·2·3·4로 돼 있는 것은 시퀀싱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 동시에 행동하게 돼 있는 겁니다.

문제의 속성을 모르고 다른 나라 합의가 돼 있는 것을 갖다가 1·2·3·4로 시퀀싱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리는 것이고 우리도 주도를 못 하는 거예요. 정부의 각료들이 문제의 속성도 모르면서 무슨 비핵화가 되고 난 다음에 평화체제를 한다? 그것 지금 우리 정부 말고 아무도 그

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러면 왜 9·19 공동성명 할 때 그때는 바로 평화체제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송민순 위원 9·19 공동성명에 들어갔는데 불능화 단계…… 말씀 잘하셨네요. 불능화 단계까지 하고 핵 폐기 단계에 들어가면, 불능화를 마치고 핵 폐기 단계에 들어가면 관계 정상화를 논의하게 돼 있고 관계 정상화를 하게 되면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 간에 그것을 협의를 한 것 아닙니까? 기록을 다 보십시오.

○통일부장관 현인택 아니, 그런데 지금의……

○송민순 위원 지금은 우리가……

○통일부장관 현인택 핵 문제 상황은 오히려 지금은 그때보다, 불능화보다는 더 뒤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송민순 위원 불능화가 완료를……

○통일부장관 현인택 아니, 지금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오지도 않고 오히려 지난번 2·13 합의보다 더 후퇴한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송민순 위원 불능화를 완료하는 과정에서 검증의정서 때문에 좌초가 된 거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렇습니다.

○송민순 위원 그러면 검증의정서를 어떻게 할는지, 불능화 완료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핵 폐기 단계와 관계 정상화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관계 정상화 들어가면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다 끌고 와서 협상을 주도해야지, 여기서 그렇게 하면 되지……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러면 그런 대화들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그런 대화는 당연히 6자회담에 돌아와서 해야지요.

○송민순 위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러면 북한이 당연히 6자회담에 돌아와서 그런 논의들을 앞으로 진전시켜 나가고 그런 논의들이 진전돼 가면 평화협정 얘기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송민순 위원 그래서 6자회담 진행과 함께 평화체제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되지, 왜 '비핵화가 되어야 평화체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게 다 걸림돌이다. 같이 묶여 돌아가야 될 바퀴에 한 바퀴를 먼저 돌려야 다른 바퀴가 돌아간다'고 함으로 해서 못 가는 겁니다. 자동차가 한 바퀴만 돌아가면 전체가 다 돌아갑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아니지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송 위원님.

당연히 6자회담에 돌아와야 비핵화 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6자회담에 돌아오지도 않고 회담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비핵화가 진전이 됩니까? 그렇게 되면……

○위원장대리 김충환 이 정도로 논의를, 너무 말하자면……

○송민순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제가 추가적인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예, 이게 위원님과 장관님 사이에 아주 진지하고 또 아주 뜨거운 토론이 되기 때문에 조금 식히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신낙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신낙균 위원 송민순 위원님이 하신 그 문제에는 저도 같은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병행하자는데 왜 우리 정부만 그렇게 순서로 보아서 일을 어렵게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우리에게 실효성이나…… 북한도 병행으로,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도 거기에 다른 이견이 없고 미국 역시 병행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하는 그 점이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송민순 위원께서 더 자세한 질의를 하신다니까 그때 답으로 미뤄 놓겠습니다.

우선 올해가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이면서 동시에 6·15 남북정상회담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기에 의미가 크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최근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방북했고 또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의 중국 방문이 전개되면서 6자회담 개최 논의가 좀 급히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북 제재 해제와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북 제재 해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우선 간단하게 답을 먼저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대북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와서 비핵화에 대한 진지한 진전의 모습을 보여야 될 것으로 저희

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대북 제재라는 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지난 5월에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해서 유엔이 그 문제를, 제재를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6자회담에 돌아와서 비핵화에 대해서 진지한 진전의 모습을 보이게 되면 거기에서 아마 해제의 문제가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신낙균 위원 그렇습니까? 그때 논의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의 입장은 그것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러면 지난 4일 장관님하고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면담을 가지셨는데요, 그 자리에서 캠벨이 "한미는 남북 정상회담과 6자회담을 함께 추구하는 데 대해서 의견 일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6자회담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진행된 것인지?

○통일부장관 현인택 한미 간에요?

○신낙균 위원 예, 남북 정상회담에 관한 것이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남북 정상회담에 관해서 무슨 구체적인 논의를 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남북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남북 관계도 또 한미가 논의하는 중요한 의제이기 때문에, 즉 북한 핵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는 북한 핵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그런 문제들을 긴밀하게 논의한다는 게 바로 면담의 내용이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낙균 위원 그러면 두 분 간에는 남북 정상회담에 관한 논의는 안 하셨다는 거예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남북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그런 논의가 있을 때도 한미가 여러 가지 긴밀하게 논의한다 그런 내용의 얘기를 했습니다.

○신낙균 위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캠벨 차관보는 "정상회담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이 바로 그다음에 와야 하는 필수적인 조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진의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북한이 6자회담에 빨리 돌아와야 된다는 의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낙균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다 '바로 다음에 오는' 그야말로 장관님 말씀대로 시퀀스를 얘기를 해서 그러면 6자회담이 남북 정상회담보다 중요하다는 것인지 미국으로서는……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는 전혀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낙균 위원 그런 의미 없이 그냥 그렇게 순서를 말했다고요?

그러면 그다음은 중복되니까 생략하고 한 가지 더, 북한이 작년 11월 30일 화폐개혁을 단행한 이후에 우리 다 잘 아는 얘기입니다만 물가·환율 폭등으로 식량난이 한층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정보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늘 '대북 지원에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중단 없이 지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북핵 상황과 연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질의하는 게 인도적 지원만큼은 순수하게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데 통일부의 입장은 똑같은 것입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점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니까 더불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똑같고요, 앞으로도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연말에도 저희들이 약 500억 원에 가까운 인도적 지원을 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영유아들 또 임산부 또 취약노인층,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 질병 관련해서 또 긴급구호 해 달라는 그런 인도적 지원은 아마 지난번 타미플루 50만 명분을 저희들이 지원한 것처럼 지원을 할 것이고요 앞으로도 물론 북한 산림녹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낙균 위원 특별히 신종플루에 대해서 신속하게 지원하신 것은 아주 잘하신 일이라고 저희도 평가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간단한 것은요, 올해 6월에 개최되는 남아공 월드컵에 남북이 동시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간들은 남북이 공동으로 응원단을 구성한다고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함께하는 것을 지원하고 추진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지금으로서는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신낙균 위원 아니 앞으로 하도록 생각해 보실 그런, 고려한다는 말씀을 잘하시는데 그런 생각도 안 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아직은 그럴 계획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신낙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신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영 위원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만 또 위원회를 이렇게 단출하게 해 보는 것도 처음인데요.

현 장관님, 아까 업무계획을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할 계획입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필요하시면 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토탈 케어'가 무슨 말이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아주 종합적인 보살핌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동영 위원 다른 부서는 몰라도 통일부는 우리말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저도 불쑥 영어 튀어나오는 것 대단히 안 좋게 생각합니다만. 여기 또 '반디' 뭐……

○통일부장관 현인택 '반디'는 우리나라 말입니다.

○정동영 위원 아니, Best……

○통일부장관 현인택 '반딧불'을 말합니다.

○정동영 위원 그게 아니고……

○통일부장관 현인택 영어로 그 밑에다 뭘 또 써 놓았습니다마는 그것은 그게 아니고요, '반디'는 영어가 아니고 우리말 '반딧불'입니다.

○정동영 위원 하여튼 통일부 보고나 정책에 영어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개성공단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100만 평에 전기, 수도, 포장, 가로등, 폐수 다 되어 있고 지금 몇 년째 3분지 2가 비어 있잖아요. 언제까지 그것 다 채울 수 있나요? 기왕 우리 세금으로 기반시설 다 해 놨는데 우리 중소기업, 희망하는 공장들 대개 언제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하여간 저희 정부가 기업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인커리지(encourage)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하여간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봄에 개성공단 차단조치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행한 것은……

○정동영 위원 그 그림을 다음번 업무보고할 때 개성공단이 앞으로 이 정부 2012년까지 어디까지 갈 계획인가? 가령 전반적인 상황과 연동해서 단계적 계획 있으면 좀 해 주시고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3통 얘기 수년 되는 얘기인데 이것 알고 계십니까? 요즘 3통이, 그중에 통행·통신·통관의 통행이 북쪽보다 남쪽이 더 까다롭게 해서 문제다 그런 얘기 혹시 들어 보셨어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는 과문합니다마는……

○정동영 위원 예를 들면 원래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두 번 왔다 갔다 하던 것 지금 스물세 번 왔다 갔다 하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정동영 위원 스물세 번 맞습니까? 스물세 번, 그러면 30분 간격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가령 북쪽에서 나올 때 4시에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일 보다가 4시 반에 왔다, 5시에 왔다 이러면 북쪽에서는 각서를, '다음번에는 시간 지키겠습니다.' 각서 쓰면 그냥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침 9시에 통과하려고 서울에서 갔는데, 광화문에서. 9시인데 눈이 와 가지고 9시 반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해 와라.' 해서 3일 걸린다는 거예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것은 북한이 그렇게 하도록 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북쪽에서 나오는 것은 지금 애로사항이 없는데 남쪽에서 넘어가는 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렇지 않아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건 우리가 막는 것이 아니고요.

○정동영 위원 다시 한번 나중에 확인해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건 북쪽에서 막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다음에 영유아 지원, 작년에 WHO에 얼마 갔었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WHO에는 1300만 불……

○정동영 위원 그런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 정도로, 1500만 정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아까 영유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그러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걸 좀 늘릴 계획을 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올해 남북협력기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수준보다 내년도 수준을 좀 올릴……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뭐 그건……

○정동영 위원 왜냐하면 영유아 지원을 강화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묻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것은……

○정동영 위원 증액 계획이 있습니까? 생각이 있으세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필요하면……

○정동영 위원 그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서 북한에 정말 생산적 인도지원, 영유아 지원이야 누구도 토를 달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제가 정부에 있을 때 시작한 사업입니다만 좀더 본격적으로 확대해서 현 장관께서 해 주시면, 부탁을 드립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정동영 위원 그리고 평화체제 문제 많이들 질문하셨는데요, 노태우 정부 이래로 노태우 정부,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다 그 비전이 있었어요. 다 그 목표가 있었고 그림이 있었는데 이게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우리 현인택 장관께서 생각하는 평화체제 그림, 그 알맹이가 뭡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알맹이…… 글쎄,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동영 위원 당사자는 누구누구예요?

'노태우 정부 때는 2+2이고 노무현 정부 때는 그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 4자'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2+2입니까, 4자입니까 아니면 남북입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남북이 기본적으로 하고 또 거기에 역시 정전협정을 한 당사자들이 있으니까 2+2에 가깝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2+2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정동영 위원 그런데 9·19 제4항에 보면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해 가지고 사실은 4자를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9·19가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 현 장관이 말씀하신 것, 해서 이 정부가 평화체제에 관한 비전과 전략이 이런 거다 이걸 좀 설명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국회에 보고하실 때는 평화체제에 관한 그림을 우리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작년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남북 간 재래식무기 감축도 논의해야 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일부에서 당연히 이와 관련해서 후속조치가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즉 어떻게, 그러니까 비핵화 노력과 함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재래식무기를 감축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작성이 됐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구체적으로 그것을 저희 통일부에서 아직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하여간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정동영 위원 대통령께서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제안했으면 당연히 통일부에서 그걸 뒷받침하는 준비와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재래식무기 감축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국방부와 또 그 담당……

○정동영 위원 지금 말씀에 따르면 같이 협의를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어떤 단위에서든지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간 논의를, 여건이 허락하면 논의를 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오늘 너무 시간도 꽤…… 고생하셨기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정동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전에 통일부 책임을 맡으셔서 애쓰신 적이 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심도 있고 깊이 있는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회의가 거의 끝날 때가 다 되어 갑니다. 우리 송민순 위원님 보충질의 3분 하시고 그다음에 사실 저도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짤막하게 하고 오늘 토론을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민순 위원 통일부장관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것은 국회에 세부적인 사항은 다 안 내놓더라도 국민들한테 방향은 좀 제시를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 이야기하고 북한 핵문제 이야기하는데 제 기우인지는 모르지만 한국의 깃발이 잘 보이지 않아요, 한국이 어디 있는지. 우리 문제인데 한국이 보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사람이 왔다 갔다 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 한국이 어떤 정책의 프레임(frame)을 가지고 주도를 해서 끌고 가는지 이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걱정이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조금 전에 정동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평화체제나 제가 생각하는 평화체제나 그 형식과 내용이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법을 이야기하는 건데 알맹이는 결국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그리고 북한하고 미국이 적대관계에 있으니까 그게 정상화되고, 그 두 개가 평화체제의 핵심 아닙니까? 그 알맹이 아니겠어요? 거기에 그것을 짜는 것이 4자회담이든 뭐 3·5자든 어떤 회담이든 간에 이걸 통해서 하나의 형식을 짜는 것 아니겠어요?

이 형식과 알맹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선 알맹이가 진전이 있어야 형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 알맹이는 결국 관계 정상화이고 남북, 북·미 관계 정상화 이것은 결국 북 핵문제의 진전과 같이 가는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통일부장관께 묻고 싶은 것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를 하면 남북, 북·미 관계 정상화와 북한 비핵화를 포함해서 실질적인 평화체제의 알맹이 문제를 논의하겠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알맹이 문제를 논의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답변 좀 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남북관계 정상화 또 북·미 관계 정상화 그리고 그런 것을 위해서 평화체제 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 논리가 계속 꼬리를 물게 됩니다. 남북 관계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핵 문제의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될 것이고요, 또 그렇게 되면 그것이 평화체제 논의의 또 하나의 선결조건이라고까지 말씀하지 않겠습니다만 시퀀시(sequency)로 보면 또 그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6자회담에 북한이 돌아오고 비핵화에 충분히 진전이 있게 되면 당연히, 9·19 공동성명에 우리 송 위원님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조항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항은 지금도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조항의 정신을 살리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현시점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지느냐 하는 그런 문제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간에……

○송민순 위원 1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예, 마무리 지으세요.

○송민순 위원 지금 현 장관님하고 저의 토론이 쳇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민순 위원 비슷한 얘기인데, 지금 자꾸 시퀀시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 이것은 자동차를 우리가 생각하면 두 바퀴, 오른쪽 바퀴 왼쪽 바퀴가 같이 굴러가는 겁니다. 차가 앞으로 나가는데 한쪽 바퀴만 굴러가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관계 정상화라는 바퀴가 돌아가는 것은 바로 평화체제 협상의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바퀴를 같이 돌려 나가는 것을 한국이 운전대를 잡고 그렇게 해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 장관님은 계속 왼쪽 바퀴가 먼저 돌아야 그다음에 조금 이따가 오른쪽 바퀴가 돌아간다 이런……

○통일부장관 현인택 아닙니다.

지금 바로, 방금 말씀하신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동의도 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

각합니다. 저희들이……

○송민순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건 지도를 하겠습니다.

○송민순 위원 같이 돌리겠다 이거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송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여야 위원님들의 아주 뜨거운 질문이 있었고 또 장관님 토론 잘해 줘서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묻고 싶은데 오늘 마침 마지막 순서가 돼서 몇 가지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금강산 관광 문제가 지금 현재 지난번 보도된 걸 보면, 실패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돼 있지요?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실패라고 규정하기는 어렵고요. 하여간 회담은 우리가 저쪽에다가 충분히 이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점들이 서로 논의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그런 논의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계속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그동안 여러 차례 보도된 바도 있고 한미 관계 사실 또 얘기를 했는데 금강산 문제는 유엔 결의하고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는 인정해도 되겠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지금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그래서 세세한 것 너무 이렇게, 말하자면 따지는 것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금강산 관광 문제는 서로 신축성 있게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그동안 쭉 주장을 해왔던 걸 참고하셔 가지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아까 남아공에서 있는 남북공동응원단 문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신낙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현재는 생각이 없다, 또 앞으로도 검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말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뭐 그건…… 정부가 지금까지 그런 것을 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그것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위원장대리 김충환 지난번에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의 이춘식 위원님하고 또 문학진 위원님, 제가 남아공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고 그때 당시에 우리 세 여야 간사 및…… 세 사람이 그 기자간담회 할 때 한번 이것을 적극 검토해 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었고 또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은 7회 연속 진출 또 북한은 44년 만에 본선에 진출이 된 상태이고 또 지금 이것이 6월 12일부터 시작해서 6월 25일까지 진행되는 이러한 시기적인 문제도 있고 이 기간 중에 6·15, 6·25 등등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7000만 동포가 지금 여기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체육행사를 통해서 민족의 하나됨을 보여 주고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지 마시고 또 우리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여야 간사를 포함해서 상당수 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하면 남북 간의 체육문화행사에 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장관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시냐에 따라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앞으로 월드컵 같은 행사는 역사적으로 두고두고 계속 되돌아보는 중요한 문화체육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번 외교통상통일위원회나 통일부장관의 재임기간 중에 있어 또 하나의 역사적인 행사가 되는 만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아까 남북 평화협정 문제와 관련해서 6자회담,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도 순차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자꾸 논쟁의 연속이 되니까 이 문제들이 동시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논의를 길게 하게 되면 또 시간이 많이 걸

리니까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당사자 문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북 간의, 우리 북한과 대한민국이 당사자가 되고 또 그 밖의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조건이라면 조금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한 말씀……

○통일부장관 현인택 평화협정의 문제는 여러 가지, 그 내용이 사실상 단순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하여간 말씀하신 것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과연 정말로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 그 핵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걸 잘 유념해서 관련 부처와 충분히 토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이상으로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통일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께서 오늘 오후 2시에 일본 외상과의 일정이 있어서 이석을 요청해 왔습니다. 장관께서는 지금 떠나시도록 하시고요, 나머지 한 5~6분 시간 걸리는 일은 차관이 있는 동안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떠나시기 전에 오늘 인권법 통과된 것에 대한 장관 말씀을, 그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존경하는 김충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의안에 대해서 심의해 주시고 그간에 황진하 의원께서 발의하신 북한인권증진법안, 황우여 의원께서 발의하신 북한인권법안, 홍일표 의원께서 발의하신 북한인권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윤상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북한인권법안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법률안이 의결됨으로써 대북 인권정책 추진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향후 대북 인권정책이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되면 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통일부 소관 법률안들을 심의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께서는 이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질의 중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이미경 위원, 정의화 위원, 송영선 위원, 신낙균 위원, 김충환 위원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정부 측은 답변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위원님들로부터 통일부의 주요 정책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정책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장관께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영선 의원 대표발의)(송영선·이성헌·한선교·김을동·심재철·이명수·김우남·이정선·정영희·노철래 의원 발의)

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 의원 대표발의)(김충환·김옥이·송민순·공성진·김용구·김영진·강명순·김장수·신상진·이계진·이경재·김창수·이한성·강석호·이종구·안효대·이해봉·임동규·권영세·정진석 의원 발의)

10. 북한 지역 영유아 영양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이종혁·조승수·이진복·정수성·홍정욱·김충환·김성순·신상진·김기현·김태원·이성헌·유성엽·유기준·김부겸·김을동·김영진 의원 발의)

(13시11분)

○위원장대리 김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 송영선 의원과 김충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종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 지역 영유아 영양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이상 2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동영 위원 위원이 없어도 상정해도 돼요?

○위원장대리 김충환 상정은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동영 위원 혼자도 할 수 있어요?

○위원장대리 김충환 계셔야 됩니다.

○정동영 위원 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김충환 예, 있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바라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짤막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영선 의원님과 김충환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하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요약 검토보고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1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2개의 법률안들은 국내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2만 명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로써는 이들의 정착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 힘든 실정이며, 법이 제정된 후 12년이 경과한 상황에서 현실에 맞게 규정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동 법률안의 개정 내용들은 종전의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있어 미비하거나 미흡하다고 여겨졌던 법과 제도를 보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문의 내용을 검토하면, 첫째 송영선 의원님 안은 제15조의2를 신설하여 거주지 적응교육과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심리 및 진로상담, 취업 지원, 생활정보 제공, 사회서비스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역적응센터를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응센터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대될 북한이탈주민의 숫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상 3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동영 위원 위원장, 잠깐만요.

서면으로 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서면으로 할까요?

○정동영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나중에 듣는 게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그러면 오늘 위원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심사보고를 하는 것으로 할까요?

○정동영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충환 검토보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정동영 위원 여기까지만 합시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예.

오늘 이 법안에 대해서는 상정하는 것으로, 상정만 하고 여기에 대한 대체토론 및 소위 회부 문제는 다음에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한나라당의 전국위원회가 열려서 위원님들이 많이 자리를 떠나시게 된 것을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정동영 위원님을 비롯해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끝까지 이렇게 진지하게 통일부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또 토론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설 연휴가 끝난 후 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외교통상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산회)

○출석 위원(24인)

구 상 찬	권 영 세	김 충 조	김 충 환
남 경 필	박 상 천	박 선 영	박 주 선
박 진	송 민 순	신 낙 균	안 상 수
윤 상 현	이 미 경	이 범 관	이 춘 식
이 회 창	정 동 영	정 몽 준	정 옥 임
정 의 화	정 진 석	홍 정 욱	황 진 하

○청가 위원(1인)

진 영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홍 일 표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구 희 권
전 문 위 원	권 기 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통일부

장 관	현 인 택
차 관	홍 양 호
기 획 조 정 실 장	김 호 년
통 일 정 책 실 장	김 천 식
정 세 분 석 국 장	양 창 석
교 류 협 력 국 장	김 남 식
통 일 교 육 원 장	홍 재 형
남 북 회 담 본 부 장	엄 종 식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최 보 선
남북출입사무소장	문 대 근
납북피해자지원단장	유 종 렬
남북교류협력협의 사 무 소 장	이 수 영
북 한 이 탈 주 민 정착지원사무소장	윤 미 량

【보고사항】

○의안 회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2010. 2. 5 윤상현·공성진·구상찬·김성태·박선영·박준선·신지호·유기준·이경재·이성헌·조진래 의원 발의)

2월5일 회부됨

○통지

교섭단체 가입에 대한 통지

2010. 2. 11 의장으로부터 정동영 의원, 교섭단체 민주당에 가입했다는 통지가 있었음